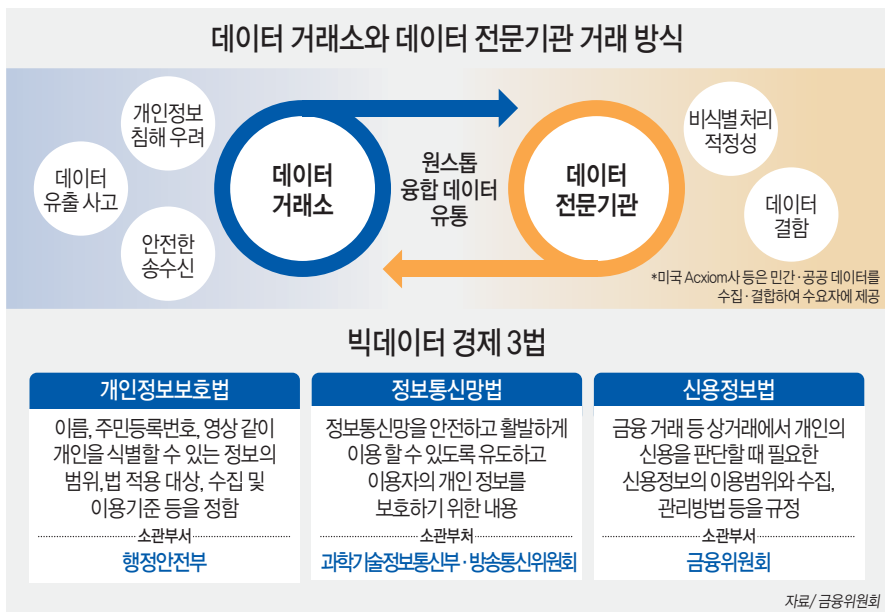


# 국회서 잠자는 빅데이터 3법... 4차혁명 '골든타임' 놓칠라

신용정보원, 민간에 신용정보 제공 핀테크 기업·연구기관 사용 허용  
 '데이터 거래소' 법안 통과 불투명  
 오남용 우려 시민단체 반발 거세

정부가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이달부터 5000여개 금융회사가 수집한 4000만명의 신용정보를 단계적으로 일반기업에 공개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빅데이터 경제 3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데다 시민단체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어 산업 발전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정보보호 내실화를 강화하고,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데이터 거래소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은 지난주부터 민간기관에 약 200만명에 대한 차주, 연체, 대출 및 카드개설 정보



가 담긴 신용정보데이터를 제공했다. 대형 금융사와 창업기업간의 데이터 격차를 줄여 맞춤형 신용평가모형 등 혁신서비스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다. 이는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분석) ▲데이터 거래소(유통) ▲

데이터 전문기관(결합) 3단계 중 첫 번째 조치다. 당시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된 '빅데이터 경제3법' 통과와 무관하게 빅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과정"이라며 "우선 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데이터를 핀테크 기업과 연구기관

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2단계 데이터거래소(유통)와 3단계 데이터 전문기관(결합) 설립이다. 패스트트랙 처리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정쟁 등이 이어지며 국회에 계류중인 '빅데이터 경제 3법'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 데이터 거래소는 비식별정보, 기업 정보 등의 데이터를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해 거래할 수 있게 한 중개 시스템이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산업 간의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곳으로, 이른바 '데이터 경제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돼 법령상 요건을 갖춘 기관을 금융위가 지정할 수 있다. 이한진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데이터 거래소 및 전문기관 설립은 데이터 3법이 처리되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데이터 경

제3법의 6월 국회 통과, 이후 하반기 통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면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제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과장은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정보법에 금융권 데이터 활용과 관리실태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상시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법안 통과시 평가결과를 확인해 취약부분을 보완방식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핑크린 얼굴 싫어요, 웃는 얼굴 좋아요"  
 축광장에서 열린 굿네이버스의 아동노동 근절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이 핑크린 아이의 얼굴을 웃는 얼굴로 바꾸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12일)을 이틀 앞둔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  
 /연합뉴스

##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GS건설 공공입찰 금지 유예... 공정위 '규제 허점'

'불복소송' 판결까지 3~4년 걸려  
 법원 "본안 판결까지 처분 정지"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누적으로 공공입찰을 제한당할 처지였던 대우조선해양과 GS건설이 행정처분 불복소송의 최종 판결까지 향후 3,4년간 시간을 벌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시장의 갑질을 근절하고자 올해부터 누적 벌점이 많은 대기업에 대해 공공입찰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지만, 법원이 그 효력을 불복소송이 완결된 이후로 정지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통 3~4년 걸리는 확정판결까지 입찰제한 조치는 유예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조선은 현대중공업과 합병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주력사업인 방위사업 입찰이 막히는지가 관건이었고 GS건설은 대기업 중 공공입찰 제한 첫 사례였다. 10일 법조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달 서울고법은 대우조선이 하도급업체 갑질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받은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벌점 부과

벌점에 따른 공공입찰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본안 판결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대우조선이 2013~2016년 27개 하도급업체에 해양플랜트나 선박 제조를 위탁하며 작업 착수 전까지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8억원 및 법인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 대우조선은 이로 인해 누적벌점이 10점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누적벌점이 5점을 넘기면 공공입찰 제한 금지, 10점을 넘기면 영업정지 처분을 맞는다. 공공입찰 제한 조치를 받으면 대우조선의 특장점인 방위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해 현대중공업과의 합병 과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런데 법원이 벌점 부과는 물론 이에 근거한 공공입찰 제한 등 추후 조치까지 모두 본안 판결까지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심지어 법원은 대우조선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도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시켰다.

현행 법규상 누적벌점이 있으면 그 즉시 감경 사유를 반영해 공공입찰 제한 등 조치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법원은 공공입찰 제한 등이 위나 기업에 큰 타격을 주는 만큼 불복 소송이 제기됐다면 최종 결과가 나온 이후 집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미 벌점 누적으로 공공입찰 제한 결정을 받은 GS건설도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 역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찰 제한을 하지 않게 하는 인용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GS건설은 2017년 4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받은 누적 벌점이 7점이 됐고, 이에 공정위는 심사를 거쳐 4월 GS건설에 대한 공공입찰 자격 제한을 발표할 바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 갑질을 없애기 위해 그간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벌점 누적업체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 등 제재를 작년말부터 재가동했고, 올해는 대기업인 GS건설을 시작으로 대우조선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려 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다소 힘이 빠지게 됐다. /박민용 기자 parku7854@

## "돈 아닌 사람·기술·노하우 물려주는 것"

>> 1면 '기रो에 선 기업승계...'서 계속  
 재계는 '부의 대물림'이란 시각도 따뜩잡다. 중기중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노재근 코아스 회장은 "30년 넘게 해온 회사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잘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물려주는 것이 자식식인지, 전문경영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사업 승계"라면서 "물려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과 기술, 사업 노하우"라고 강조했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기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일자리 유지, 창출 그리고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이라면서 "기업도 이를 통해 경제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가정신을 적극 발

휘하면서 혁신하는 모습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경울 소장은 "2017년 기준(국세통계연보)으로 피상속인 중 총 상속재산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불과 12명에 불과한데 이를 3000억원으로 하면 대상 인원은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면서 "여기에 더해 현행보다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은 1년에 많아야 2, 3명을 위한 특혜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중견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사후관리 기간 업종 변경도 다소 확대하는 쪽으로 개편안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호 기자 bada@

## 한·중·일 중앙은행총재 日 후쿠오카서 총재회의

한·중·일 3국의 중앙은행 총재가 최근 경제와 금융 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은행은 이주열 한은 총재가 10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제11차 한중일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와 이강(易綱) 인민은행 총재가 자리를 같이했다. /김희주 기자 hj89@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제11차 한중일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이주열 총재(오른쪽 첫번째)가 포즈를 취했다. /한국은행